

Safety Main News



정홍원 국무총리 및 내빈들이 지난 12월 2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2단계입주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시대 개막

고용노동부가 과천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종청사시대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2월 23일 한국노총위원장, 경총회장,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개청식을 열고, 세종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이전에 앞서 12월 16~1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각각 세종청사로 이전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청사 이전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력사 안전지원은 대기업 의무

새해에는 전국 산업현장,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은 2013년 12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 간담회에서 ‘2014년도 산재예방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영순 실장은 대기업과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한 중대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권 실장은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권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를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의 생산손실을 우려해 작업 중지 등의 조치에는 심사숙고를 거듭했는데, 새해에는 법 위반 시 원칙대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또 그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총괄책임자부터 일선의 안전보건 관리자까지 맡은 바 역할을 점검해 산재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권 실장은 현재 고위험 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담감독관 제도를 새해에는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음도 밝혔다. 그는 “1,186개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나섰는데, 사고가 전년 대비 43%나 줄었다”며 “새해에는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고용부는 현재 원청업체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엄중해진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국과수’ 본격 참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학물질누출사고나 폭발사고, 건축물 붕괴사고 등 중대 산업 사고의 원인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안전보건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년 12월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중대 재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누출·붕괴 등의 중대산업사고와 관련해 보다 과학적인 원인규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지원과 정보공유를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또 유해·위험 물질에 의한 독성연구, 시험 및 분석 지원, 시험시설과 연구시설 공동 활용, 기술 및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함으로써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에 나서게 된다. 양 기관이 공동 원인 규명에 나서는 중대 사고는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압력용기 등 기계 구조물의 붕괴 및 폭발사고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붕괴 및 도괴사고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직업성 질병이나 질식 및 중독 사고 등이다.

● 정부 최초 협업조직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출범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2013년 12월 5일 구미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안전행정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는 정부 최초의 열린 협업조직으로 합동

방재센터를 개소해 ‘범정부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를 시작으로 새해 초까지 전국 6개 산단(시화·구미·울산·여수·익산·서산)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신설된다. 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합동실태 점검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 센터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답게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화학재난대응 인력·예산·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원스톱 국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센터는 화학재난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기관 연계를 본격화해 화학사업장의 취급물질 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적용, 사고발생 시 과학적인 피해범위 예측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사고수습을 실시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국민안전에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칸막이를 허문 첫 사례”라며 “센터와 같은 범정부적인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을 다른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방재센터 개소 이후에는 그간 부처가 소관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 하던 점검이 일원화 된다. 일례로 하나의 화학사업장에 연간 10차례 이상에 달하던 실태점검을 부처합동으로 실시해 기업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따라서 산업현장도 센터의 설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 산재다발 사업장 243곳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

사고가 다발한 사업장 243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2013년 11월 29일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2012년도 기준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이상인 사업장 199곳 △2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30곳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7곳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 7곳 등이다.

공표명단에는 구미불산 누출사고(5명 사망), 울산항마지선 전복사고(12명 사망) 등 사회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중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라며 “향후 2년 동안에는 기업은 물론 그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에서도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만큼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산재 다발업체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8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